ISSUE PAPER CHECK

INDUSTRIAL ACCIDENT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축 방안 검토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들어가며

정부의 강력한 산업재해 감축 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산재예방 정책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부문 등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낮춘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산재예방정책의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25. 9. 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실태를 살펴볼 때,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축 방안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보완 방향

(1)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축 방안의 주요 내용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공공기관의 인력·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기관별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작업, 6개월 미만 신규자 단독 금지작업 준수 강화 ▲재난·안전 관리, 고위험 현장 인력

우선 재배치·증원 추진 ▲노후 시설·장비 교체, 신기술 안전 장비 도입 등에 대한 투자 계획 작성,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 주기적 점검·관리 ▲기관장·경영진, 수급업체 사업주, 현장관리자, 현장노동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수급업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평가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기관장 안전 경영 책임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 대폭 상향 ▲경영평가에 안전 가점을 신설하여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등 반영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노동부)에서 중대재해 반복 시 평가점수 대폭 감점(50%), 발주현장 노동자 면담 신설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 도입·확대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보완 방향

정부가 2025. 9. 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주로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 면밀한 산업재해 발생 실태 분석에 기초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의 내용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구체적 방안의 효과에 대한 심층 평가, 산업재해 발생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에 기초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직업병 예방 등 산업보건대책을 포함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노동안전보건' 종합대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내용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예방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산업재해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행정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범정부 차원의 행정력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작동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과제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재해 통계의 체계적 수집·관리·분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발생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는 정확성, 신뢰성 등이 낮아서 법제도, 정책 등의 근거가 되기에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감축은 민간부문을 견인하는 강력한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부족한 점이 많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공무원, 교사, 군인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산업재해 통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대책 검토

(1) 기획재정부 지정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현재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안전관리 중점기관 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기관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패트롤 및 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특별관

리기관 발주 공사 수급인에 대한 적정 공사 기간 및 적격 수급인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2)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위장 직고용 방지 강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재하청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임에도 계약직, 일용직 노동자 등으로 위장하여 사실상 재하청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장 직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 계약 체결 시와 공사 진행 중에 위장 직고용을 적발하기 위한 검증 프로세스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2인 1조 필요 작업 범위 확대 재설정과 관리 강화

공공기관 산업재해 발생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2인 1조 필요 작업의 범위를 확대 재설정하여 주무부처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및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불이익 강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4) 야간·휴일 근무 금지 작업 설정

공공기관 산업재해 발생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야간과 휴일에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작업의 범위를 설정하여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야간과 휴일에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업무임에도 공중의 필요성에 의해 부득이 야간과 휴일에 작업을 허용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5) 노동부와 주무부처 합동 감독 조직의 한시적 구성 및 운영

노동부와 주무부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합동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일회적 합동 감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와 주무부처의 합동 감독 조직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부와 주무부처의 주기적인 합동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무부처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빠르게 도출하여 곧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6) 전체 공공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추진

현재 정부는 사업장 단위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노동부 내에 공공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 구축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제안한 특별관리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치며

공공기관의 사실상의 사용자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의 효과가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빠르고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감축은 민간부문을 견인하는 강력한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일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부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호응과 참여도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